
 금융위원회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1>		 금융감독원
	보도 2016.8.24.(수) 17시부터	배포 2016.8.24.(수)	
책 임 자	금융위 서민금융과장 하 주 식(02-2100-2610)	담 당 자	사 무 관 전 동 연(02-2100-2614)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구 경 모(02-3145-8020)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윤 창 의(02-3145-6770)		은행제도팀장 김 용 태(02-3145-8030) 저축은행총괄팀장 이 길 성(02-3145-6772)

제 목: 2차 P2P 대출 T/F 회의 개최

- P2P대출의 규율방식 및 다양한 영업방식에 따른 주요 쟁점 논의 -

- 금융위원회는 금일 'P2P 대출 T/F' 2차 회의를 개최하여, P2P 대출의 규율방식과 다양한 영업방식에 따른 주요 쟁점을 논의하였음

< P2P대출 T/F 2차 회의 개요 >

- ① (時·所) 8월 24일 15:00~ / 금감원 연수원
- ② (참석) 금융위원회(TF팀장: 사무처장), 금융감독원, 금융연구원, 자본시장연구원, 한국소비자원, 학계·법조계 전문가
- ③ (논의주제) P2P 대출의 규율방식 및 사업 운영방식에 따른 주요 쟁점사항

- 우선, T/F에서는 '투자자의 보호'와 '시장의 성장'이라는 정책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, **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안임에 공감**
- 다만, 가이드라인 마련에 앞서 P2P 대출 업체의 **다양한 사업 운영 방식이 현행 법령에 저촉될 소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**
- 모든 P2P 대출 업체가 **금융기관(은행, 저축은행, 대부업체)과 연계한 영업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, 그 안에서 이뤄지는 사업운영 방식은 업체별로 상이**

- 업체들의 다양한 사업 운영방식 중 **현행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**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가이드라인으로 **용인**하기는 곤란하며,
- 또한, **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니지만, N(다수의 투자자) : N(다수의 차입자)을 중개하는 플랫폼 제공이라는 P2P 대출의 기본개념을 벗어난 경우,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정한 규율이 필요**

- 2차 T/F 회의에서는 '단일 투자자 허용 여부'와 '법인이 투자자로 참여시 대부업 등록 여부'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음

- **단일 투자자 허용 여부**에 대해서는, 1(단일 투자자) : N(다수 차입자)의 경우 **사실상 대부업의 영업형태과 같으므로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**하고 필요한 경우 투자한도를 설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음
- 이 경우 투자한도에 대해서는 **시장의 상황, 클라우드펀딩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** 주로 제기됨
- 투자자의 자격을 **법인 중심으로 운영하는 경우, 법인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에 비해 투자규모가 크고 반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(온라인)대부업 등록 대상**이라는 의견과,
- P2P 대출에서 **대부행위는 개인·법인 투자자가 아닌 P2P 플랫폼과 연계된 은행·저축은행·대부업체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대부업 등록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** 나란히 제시됨

-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(T/F팀장)은 마무리 발언에서,

-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보호뿐만 아니라, **P2P 대출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현행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불확실성을 가능한 제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해 나갈 것**이라고 언급